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이상 앞당겨 받는다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괄 환급의 경우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3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개별 환급의 경우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소속 근로자가 직접 3월 24일까지 신청하면 환급금 지급요건을 검토 후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연말까지 가입시 수수료 전액 면제

올해 연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2천800

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로 퇴직연금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 경제활력 제고 박차... '미래성장 세정지원' 드라이브

국세청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이른바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통합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한국판 뉴딜기업은 제외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을 추가하는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 개편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지원대상 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지원을 실시하고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기업에는 맞춤형 세무상담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혁신성장 기업은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수출 ▲신산업 ▲구조조정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된다.

국세청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분청, 지방국세청(7개), 세무서(133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